

주관적 행복과 객관적 삶의 질 차이의 지역분포 분석: 지역역량(regional capability)의 관점에서*

구교준**

이희철***

김지원****

박차능*****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행복 간의 격차에 주목하여 지역의 객관적 환경이 주민의 만족으로 치환되는 과정을 지역역량으로 정의하였다. 지역역량에 따라 물리적 환경이 주민들의 만족으로 귀결되는 과정이 달라지게 되므로 지역역량은 지역의 정책 과정에 매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지역역량의 추정을 위해 7개 분야의 객관 지표를 선정하고 표준화하여, 해당 데이터와 주관적 행복을 각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지역역량은 지역 주민의 실제 만족도가 물리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의 기대 만족도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의 잔차를 통해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객관적 여건이 더 좋다고 평가되는 영남권의 지역역량이 호남권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객관적 여건이 더 좋은 강남권의 지역역량이 강북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의 주관적 만족으로 연결되지 않는 투자는 결국 비효율적일 뿐이며, 물리적 투자를 주관적 만족으로 전환하는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야 최적의 공공투자 포트폴리오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물리적 환경이 주민만족으로 치환되는 과정에 대한 메커니즘 분석과 저해요인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어: 지역역량, 행복, 공공투자

* 본 연구는 국회 미래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제1저자, 교신저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행복, 지역혁신 창업 등이다 (jkoo@korea.ac.kr).

***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양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관심 분야는 지방자치, 지역격차, 네트워크 분석, 행복 등이다(dlgjclfl@dyu.ac.kr).

**** 경기대학교에서 행정학 학사학위를 받고,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 연구분야는 공공공간, 행복, 삶의 질이다(rlaqldnjs21@naver.com).

*****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도시 계획, 행복, 지역 개발 등이다(chanemi0714@gmail.com).

I. 서론

행복에 대한 관심은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행복을 쾌락으로 보고 고통 없는 상태로서의 쾌락이 인간의 공동선이라고 해석한 Aristippus와 Epicurus에서 행복의 근원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정의한 Aristotle까지 행복의 철학적 뿌리는 넓고도 깊다(McMahon, 2006). 하지만 사회과학이 행복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강한 실증주의 전통에 영향 받아 온 사회과학이 눈에 보이지 않고 측정하기도 쉽지 않은 행복을 오랜 기간 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복에 대한 초기 사회과학적 연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관적 행복 보다는 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의와 측정이 용이한 객관적 물리적 조건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러한 접근은 Ogburn(1935)을 중심으로 건강, 교육, 주거, 소득과 같은 삶의 요인들 중 무엇이 'good life'를 형성하는 물리적 조건인지 고민하였고, 이후에는 객관적 삶의 질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 이러한 접근은 고전 경제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개인의 효용을 정의와 측정이 용이한 소비행위를 통해 분석하고 연구해 온 전통과 일맥 상통한다.

행복 연구에 있어 객관적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은 물리적 조건이 주관적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즉 효용이론이 효용을 소비의 함수로 설정하고 소비 행태를 통해 효용을 분석하듯이, 이러한 접근은 주관적 행복을 물리적 조건의 함수로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행복을 측정하는 다양한 지수들을 살펴 보면 주관적 지표 중심의 지수와 객관적 지표 중심의 지수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Veenhoven(2000)은 객관적인 진료기록 상으로 의사가 건강하다는 판단을 내린 사람도 주관적으로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는 사례를 들어 주관지표와 객관지표 간의 괴리 가능성을 지적한다. 또한 국가 수준에서도 객관적 지표 중심의 대표 지수라고 할 수 있는 Human Development Index의 2019년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상위권인 22위에 랭크 되었지만, 주관적 지표 중심의 대표 지수인 World Happiness Index에서는 중하위권인 54위에 머물러 있다.

물리적 조건과 주관적 행복 사이에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물리적 환경을 향상시켜 주민의 후생을 증진시키려는 접근을 하고 있는 대다수 지방정부의 전략을 고려할 때 정책적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주민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물리적 조건에 대한 투자라면 그러한 투자가 가지는 가치가 무엇이나

는 질문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물리적 조건과 주관적 행복 사이의 상관관계가 소득이나 성별 등 주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고 물리적 조건과 주관적 행복 간의 괴리가 특정 집단이 물리적 조건의 혜택을 받는데 소외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그 문제는 더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의 물리적 환경이 주관적 행복으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인 지역역량(regional capability)에 주목한다. 지역역량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들이 지역의 물리적 환경이 제공하는 가능성을 주관적 행복 증진을 위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지역역량이 지역의 물리적 환경이 주민의 주관적 행복으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으로 정의되면, 이는 많은 지방정부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동일한 물리적 투자를 하더라도 지역역량에 따라 주민의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지방정부는 단순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투자 뿐 아니라 이를 어떻게 주민 행복으로 효과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를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역량을 정의하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역량의 분포를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객관적 삶의 질, 주관적 행복, 그리고 지역역량

사회과학 분야에서 행복 연구자들이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행복의 측정 문제이다.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며, 실증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사회과학은 행복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측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지난 반세기 동안 행복 연구에서 측정과 관련된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행복이라는 주관적 현상을 직접 측정하기 보다는 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객관적 물리적 환경에 초점을 맞추려는 접근이다. 'good life movement'로 불리는 이러한 흐름은 1930년대에 Ogburn(Ogburn, 1935; Ogburn & Jaffe, 1936)등을 중심으로 좋은 삶을 구성하는 지표를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1960년대에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한 행복 연구로 붐을 이루었다.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초기의 노력은 경제 관련 지표에 집중되었다. 이는 'good life movement'의 출발점이 되었던 미국 사회의 강한 자본주의적 속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좋은 삶이란 결국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직결된다고 본 것이다(Palys & Little, 1980). 특히 경제적 측면의 발전을 측정하는 지표는 화폐가치로

단일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Gross National Product(GNP)와 같은 단일지표가 폭넓게 사용되었다(de Neufville, 1975; Wilson, 1973). 국내에서도 소득과 행복 간의 정적인 관계를 밝히는 것(류지아, 2016)에 그치지 않고, 소득의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한 연구(박종선 & 황덕순, 2015) 등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전반적인 사회 후생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경제지표의 한계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명확해졌다. 특히 경제지표는 다양한 측면의 삶의 질, 특히 경제적 풍요로움에 수반될 수 있는 불평등이나 환경오염 같은 문제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받았다(Carley, 1981). 그에 따라 경제지표 중심의 후생 측정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접근이 Andrews(Andrews & Withey, 1976) 등이 강조한 사회가 처한 현재의 상황과 시간적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회지표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회지표를 통해 한 사회의 구성과 현황, 변화 등을 평가하는지는 바뀔 수 있지만 적절하게 선택된 사회지표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Land, 1983). 즉 좋은 사회지표는 혈압이나 체온과 같이 우리 몸의 상태를 보여 주는 건강지표와 같다. 건강지표가 우리 몸 어디에 모자람이 있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보여주는 것처럼, 사회지표는 우리 사회의 어디를 채우고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등을 표시하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한 사회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회지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우선 첫 번째가 경제를 포함하여 객관적인 삶의 조건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이를 객관적 삶의 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개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객관적 사회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객관적 삶의 질을 평가하는 사회지표는 건강, 교육, 주택 등과 같이 한 사회의 주요 단면을 보여줄 수 있으면서도 공공정책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의 핵심지표들로 구성된다(Fox, 1974). 이러한 접근은 최근까지도 이어져서 UNDP의 Human Development Index(HDI)나 OECD의 Better Life Index(BLI) 등과 같이 국제기구에서 각국의 삶의 질을 비교평가 하는 도구로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객관적인 사회지표의 대안으로 발전된 두 번째 접근은 사회변화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서 개인의 주관적 심리상태를 모니터링 하자는 주장이다(Campbell & Converse, 1972). 즉 사회변화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이 얼마나 변했는지 가 아니라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 감정상태, 가치 등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객관적 사회지표와 주관적 심리상태 사이의 상관

관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실증적인 경험은 이러한 주장에 많은 힘을 실어 주었다. 즉 삶의 질을 논하기 위해선 단순히 물리적 객관적 환경만을 평가해서는 안되고, 그것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개인의 후생과 관련된 다양한 주관적 지표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개인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접근이 주관적 행복을 처음으로 이론화하고 체계적으로 측정하려 했던 심리학의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개념이다. 주관적 안녕은 행복을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과 긍정적인 감정상태로 정의한다. 주관적 안녕은 특히 개념적 모호성으로 인해 과학적 탐구의 대상에서 오랜 동안 소외되어 있던 행복을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평가로 개념화하고 그 중심에 인간 후생의 평가 주체로서 개인을 두어 행복 연구의 과학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구교준·임재영·최슬기, 2015). 최근 국제비교 연구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UN과 Gallup 등의 행복지수들은 삶에 대한 이러한 주관적 평가에 바탕을 두고 한 국가의 전반적 삶의 질을 평가한다. 국내 연구에서도 객관적인 투입뿐만 아니라 개인의 만족감을 통한 주관적 인식을 세부지표로 함께 활용하기도 하며(황명진·심수진, 2008), 주관적 안녕 개념을 행복의 주요 영역으로 구성하기도 하였다(변미리·민보경·박민진, 2018; 구교준 외, 2019). 김희재·조정래(2009)의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행복할 확률을 높이는 주요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지표의 발전 과정에 대한 논의에서 본 연구는 특히 객관적 환경과 주관적 심리 상태 간의 불일치 현상에 주목한다. 객관지표와 주관지표 간 불일치의 대표적인 예는 Easterlin 패러독스라고 불리는 소득과 행복 간의 불일치 현상이다(Easterlin, 1974). 예를 들어 미국의 1인당 실질소득은 60년 대 이후로 3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사회조사에서 자신이 행복하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다(Layard, 2005). 그리고 이러한 소득과 행복 수준의 불일치 현상은 미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관찰되었다(Blanchflower & Oswald, 2004). 한국의 경우에도 2006년보다 경제적으로 성장한 2012년에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줄어들었으며(이영빈·정창무, 2013), 이현송(2000)¹⁾은 실제 소득과 기타 통제변수들은 생활만족도의 10% 변량만을 설명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와 같은 객관적 물리적 환경과 주관적 행복의 불일치 현

1) 이현송(2000:110)의 연구에서 소득만족도가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의 변량을 40% 설명하는 주요 변수였기에 실제소득이 생활 만족도의 10% 변량을 설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설명력을 가진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사실상 실제 소득은 소득만족도 변량의 10%를 설명하여 또 다른 시사점을 남겼다.

상이 가지는 패턴과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지방자치가 뿌리 내리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주민의 행복감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정된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지역의 물리적 투자가 주민의 주관적 행복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행복의 연결 고리를 살펴야 하는데, Sen의 역량이론에 바탕을 둔 지역역량(regional capability) 개념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Koo & Lee, 2015).

역량이론(capability theory)은 원래 삶의 만족도와 같은 주관지표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역량 개념을 처음 소개한 Sen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힘든 환경에 놓여 있는 제3세계의 여성들이 체념적으로 만족스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하고 주관적 행복이 개인의 후생 수준을 나타내는 적절한 지표인지 의문을 제기하였다(Sen, 1980). Sen이 개인의 후생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주관지표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역량(capability)이다. 역량이란 개인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삶을 영위하는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역량은 곧 삶의 가능성과 연결되는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는 Sen이 원래 제기한 문제의식의 맥락에서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만족이나 문제이다(Tatarkiewicz, 1976).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가능성 자체가 물리적으로 부재함에 따른 체념적으로 만족하는 삶에 대한 비판인데, 이는 주로 제3세계 개발도상국 사회에서 관찰되는 문제로 우리 사회의 맥락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둘째는 바로 본 연구의 핵심주제와 연결되는 이슈인데,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가능성이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개인의 선택으로 연결되어 주관적 만족으로 이어지는 전환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Veehoven(2000)은 객관적 삶의 질을 삶의 투입요인으로, 주관적 만족을 삶의 산출요인으로, 그리고 역량을 삶의 전환요인으로 해석하였다. 예를 들어 이동수단으로서 자전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억압적인 사회 규범 등의 이유로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자전거를 탈 수 없다고 한다면 물리적 조건인 자전거가 자유로운 이동(역량)을 통한 개인의 후생으로 전환되지 못하는데, Veehoven은 바로 이러한 전환의 문제를 통해 역량을 파악하려고 한 것이다.

한편 Nussbaum(2003)은 Sen이 제시한 이러한 역량 개념을 더욱 발전시켜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할 10가지 역량, 즉 삶의 가능성의 영역을 제시하였

다. 이들은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개인이 최대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생명, 신체건강, 신체무결, 감각/상상/사유, 감정, 실천이성, 관계, 환경통제, 다른 중, 놀이가 포함되는데, 이희철·구교준(2019)은 이를 정책연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건강, 안전, 교육, 관계 및 사회참여, 경제, 환경, 여가의 7개 분야로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지역역량 분석은 이희철·구교준(2019)이 Nussbaum의 이론적 논의를 재구성하여 제시한 7개 역량 분야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Koo & Lee(2015)가 제시한 ‘지역역량’은 역량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지역의 다양한 물리적 환경은 개인의 주관적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비슷한 수준의 물리적 환경이라도 개인의 주관적 만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의 낙후지역의 주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서관이나 공연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실제 주민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물리적 환경은 주관적 삶의 만족이라는 측면에서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만약 새로 생긴 도서관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곳에 위치해 있다면, 도로를 새로 놓거나 버스 등 지역교통망을 새로 정비하는 정책과 동시에 추진되지 않는다면 별 의미 없는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지역 주민들의 교육 수준이나 관심사와 거리가 멀다면 이 또한 별 의미 없는 투자에 그칠 수 있다. 즉 지역의 객관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방 정부의 투자와 노력은 지역 주민의 주관적 행복과는 독립적이며, 이 둘 간의 갭을 메워주는 개념을 지역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의 기존 연구 중 역량 이론을 바탕으로 지역 분석을 시도한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 역량이론을 활용하여 지역 간 격차를 설명한 연구들은 있었으나(구교준·김성배·윤종현, 2012; 박인권, 2018)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역량을 실측하고자 한 시도는 없었다. 이는 원래 역량이론이 개인 수준의 이론틀이기 때문인데, 지역의 물리적 환경이 개인 수준의 가치 추구하고 자아실현 등 행복에 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둘 간의 갭은 충분히 메워질 수 있다고 본다.

Ⅲ. 지역역량의 추정

1. 변수와 자료

본 연구는 지역의 객관적 삶의 질이 실제로 얼마나 주관적 행복으로 이어지는지 주

목하고 둘 간의 차이를 통해 지역역량을 추정한다. 이를 위해 전국의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객관적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독립변수로 주관적 행복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고, 회귀모델이 설명하지 못하는 잔차(error term)를 지역역량의 수준을 보여주는 대리지표로 활용한다. 지역의 객관적 삶의 질은 지역역량 수준에 따라 지역의 평균적 주관적 행복으로 전환되는 정도가 다른데, 이는 지역의 객관적 삶의 질을 고려했을 때 추정되는 주관적 행복과 실제 주관적 행복의 차이로 표현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적 행복의 추정값이 실제값 보다 높은 지역은 지역역량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반대로 주관적 행복의 실제값이 추정값 보다 높은 지역은 지역역량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관적 행복의 실제값이 추정값보다 높다는 것은 지역의 객관적 환경으로 예상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지역 주민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곧 지역역량 수준이 높아서 객관적 삶의 질이 주관적 행복으로 효과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역역량의 추정을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종속변수인 주관적 행복은 심리학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개념을 활용하였다. Diener(1984) 등에 의해 개발된 주관적 안녕은 사회과학 분야의 행복 연구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개념인데,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중심으로 행복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와 카카오가 공동 수집한 '카카오 같이가치 안녕지수'에 포함된 삶의 만족도 질문을 활용하여 종속변수를 구축하였다. 삶의 만족도 질문은 10점 척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통합하여 지역 수준의 주관적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한편 카카오 '같이가치 안녕지수'는 2017년 10월에서 2019년 7월까지 22개월 동안 전국에 걸쳐 4백만건 이상의 응답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데, 특정 집단의(20-30대 여성) 응답자 쏠림 현상이 있어 종속변수 구축 과정에서는 통계청 인구총조사(2018년)의 성별, 연령별 전국 분포를 활용하여 이를 보정하였다.

객관적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독립변수는 앞에서 제시한 7개 역량 도메인에 맞추어 구성하였다. 특히 개별 도메인의 객관적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도메인 별로 3개의 대표 객관지표를 활용하였다. 우선 건강 도메인은 지역별 인구 대비 의사의 수, 병상의 수, 정신건강증진기관의 수로 구성하였다. 의사와 병상은 각각 의료 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인적 접근성을 담고자 한 것이며, 이에 더해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신건강증진 기관의 수도 함께 포함하였다.

안전 도메인은 지역별 CCTV 대수와 응급기관의 수, 교통사고 및 화재 안전등급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CCTV 대수는 안전 중에서도 사고 예방(특히 각종 범죄 관련 사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응급기관은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 대처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지역안전등급은 인구 대비 교통사고와 화재 건수를 바탕으로 전국의 기초단체를 5등급으로 구분하는데, 교통사고와 화재와 같은 인재로부터 해당 지역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평가한다.

환경 도메인은 녹지지역의 비율, 미세먼지, 생활폐기물 배출량으로 구성하였다. 녹지지역 비율은 지역의 전반적 환경친화도를 의미하며, 미세먼지와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각각 지역의 대기 및 토양 오염 정도를 직·간접적으로 나타낸다. 미세먼지 자료의 경우 관측 장비의 분포가 고르지 못해 미싱값이 많은 편이었는데, 해당 기초단체의 측정값이 누락된 경우 주변 지역 측정값의 평균을 proxy로 사용하였다.

경제 도메인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인구 대비 종사자 수, 영세자영업자 비율의 세 가지 지표로 구성하였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과 인구 대비 종사자 수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필수 정보로 지역경제 분석에 폭넓게 사용되는 지표이다. 특히 지역내총생산의 경우 지역에 따라 데이터 수집 연도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연도의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기준 연도를 2016 년으로 통일하였다. 영세자영업자 비율은 전체 종사자 중 1인 자영업자의 비율로, 자영업을 위한 물적, 제도적 조건을 파악함과 동시에 중장년층의 조기 퇴직과 관련한 중요 지표로 볼 수 있다.

교육 도메인은 학업성취도, 인구 대비 학교 수와 사설학원 수의 세 가지 지표로 구성하였다. 학업성취도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로 측정하였는데, 이는 해당 지역이 제공하는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잘 보여준다. 인구 대비 학교 수는 교육의 양적 여건을 나타내기 위해 포함되었다. 한편 사설학원의 경우 공교육이 채워주지 못하는 교육 수요를 담을 수 있는 지역의 교육 여건을 측정하기 위해 포함되었다.

관계 및 사회참여 도메인은 지역별 자살률, 1인 가구 비율, 인구 대비 사회적 기업의 수로 구성하였다. 자살률은 인간관계나 사회참여의 환경을 전반적으로 측정하는 대리 지표이며, 1인 가구 비율은 잠재적으로 사회적 관계 맺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한편 사회적 기업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회참여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의 한 축으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여가 도메인은 인구 대비 문화기반시설의 수, 도서관의 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수로 구성하였다. 문화기반시설이란 박물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며 문화나 예술과 관련된 여가 인프라를 의미한다. 도서관의 경우 국공립이나 사립 도서관은 물론이며 최근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도 포함되어 독서 공간 제공 외에 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도서관의 의미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경우 퇴직한 이후의 여생을 의미 있게 보내는 데 일조하는 시설로 판단하여 지표로 활용하였다. 도메인별 지표의 상세 내용과 자료의 해당년도, 출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구성 및 출처

도메인	변 수	년도	출 처
행복 (종속변수)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2017.10~ 2019.07	카카오 같이가치 안녕지수
건강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2017	통계청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2017	통계청
	십만 명당 정신건강증진기관 수	2018	보건복지부
안전	천 명당 cctv대수	2019	공공데이터포털
	십만 명당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실 수	2018	보건복지부
	교통사고 및 화재 지역안전등급	2018	통계청
환경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비율	2018	통계청
	미세먼지(PM2.5)	2018	통계청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2017	통계청
경제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2016	통계청
	천 명당 종사자 수	2017	통계청
	종사자 천 명당 영세자영업자 수	2015	통계청
교육	학업성취도(기초학력 미달자 비율)	201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십만 명당 학교 수	2018	행정안전부
	천 명당 사설학원 수	2018	통계청
관계 및 사회 참여	십만 명당 자살률	2016	통계청
	1인가구 비율	2018	통계청
여가	십만 명당 사회적 기업 수	201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2017	통계청
	십만 명당 도서관 수	2019	공공데이터포털, 작은도서관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2018	통계청

객관적 삶의 질을 보여주는 일곱 개의 도메인을 대표하는 하위지표들은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미싱이 있는 경우에는(기초단체 수준) 해당 값을 추론할 수 있는 최적의 회귀식을 stepwise 분석을 통해 도출하여 채워 넣고 광역단체 수준의 자료를 활용하여 최종 보정하였다. 또한 모든 지표를 표준화 및 정규화하여 지표 간 비교와 연산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먼저 모든 하위지표는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적용한 누적정규분포값으로 만들어 0 과 1 사이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이 때, 세부 하위지표 중 일반적으로 주관적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지표들은 1에서 뺀 값(1-해당수치)을 이용하여 높은 값이 긍정적인 의미를 담도록 역코딩하였다. 최종 회귀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이와 같이 도메인별로 표준화된 하위지표를 합산한 후, 이를 다시 최대-최소 정규화 방법(max-min normalization)을 이용해 0 과 1 사이에서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도록 조작하는 방법으로 도출하였다.

2. 추정결과

일반적인 학술 연구에서는 회귀모형을 통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나 영향력을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도 OLS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나 일반적인 방법과는 조금 결이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추정된 회귀식으로부터 추정된 계수 값이나 변수들 간의 관계 보다는 추정식의 잔차가 가지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결과를 해석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추정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Y = \beta_0 + \beta_1 health + \beta_2 safety + \beta_3 environment + \beta_4 economy + \beta_5 education + \beta_6 relation + \beta_7 leisure + u \quad (1)$$

식 (1)에서 종속변수 Y는 주관적 행복을, 독립변수들은 7개 도메인의 객관적 삶의 질을 의미한다. 식 (1)의 회귀모형을 추정하여 객관적인 독립변수들이 주관적인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다. 이후 통계적으로 도출된 계수를 통해 지역별 객관적 삶의 질 수준을 고려했을 때 예상되는 주관적 행복, 즉 \hat{Y} 을 추정한다. 즉 이는 '현재 주어진 정도의 객관적 삶의 질 수준을 갖는 지역이라면 추정값 정도의 주관적 행복이 예상된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해서 추정된 \hat{Y} 과 실제 Y의 차이에 주목하는데, 이는 지역별로 객관적 삶의 질이 실제로 얼마나 주관적 행복으로 치환되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주관적 행복이 객관 지표를 통해 추정된 주관적 행복 보다 낮다면 이는 그 지역의 물리적 환경이 주민들의 행복으로 충분히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차이는 개인적인 이유에서건 지역적인 이유에서건 물리적 환경이 주관적 만족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역역량의 문제로 인해 일종의 누수가 발생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물론 추정값과 실제값의 차이는 교과서적으로 해석하면 지역역량을 포함한 실제 주관적 행복의 변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관찰되지 않은 다양한 요인들의 효과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역적 특성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는 지역역량 이외의 요인들은 존재한다 하더라도 지역과 무관하게 랜덤하게 분포한다고 가정한다면 잔차가 가지는 의미를 지역역량으로 해석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

〈표 2〉는 변수들의 기술통계와 OLS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행복의 평균은 10점 척도의 절반을 넘는 5.9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의 경우 최소 0에서 3점까지의 척도인 점을 고려할 때 환경, 관계 및 사회참여 도메인의 평균은 그 중간값인 1.5점보다 높고, 나머지 도메인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목해야 할 점은 종속변수인 행복의 표준편차가 독립변수들의 표

〈표 2〉 변수 기술통계 및 회귀분석 결과

변수	기술통계		계수추정값
	평균	표준편차	
행복	5.9432	0.2009	-
건강	1.3972	0.4711	0.0473* (0.0274)
안전	1.4362	0.4682	-0.0114 (0.0312)
환경	1.5645	0.4810	0.1268*** (0.0291)
경제	1.4324	0.5090	0.0778*** (0.0276)
교육	1.4614	0.3713	0.0646* (0.0353)
관계 및 사회참여	1.5100	0.3921	0.0676** (0.0333)
여가	1.4048	0.6665	0.0431* (0.0222)
R2	-	-	0.1882

※*p<.05, **p<.01, ***p<.001

준편차보다 작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행복은 주관적 응답으로 평가한 값이다 보니 응답에서 중위값으로의 쏠림 현상이 다소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회귀분석의 경우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안전을 제외한 모든 도메인이 적어도 10%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영향의 방향 또한 행복과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도메인의 경우 계수가 음수이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수치이므로 해석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회귀모형의 설명력(R²)은 0.1882로, 객관적 지표들이 주관적 행복의 지역 변량 중 약 20%를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 변량, 즉 모델의 잔차를 지역역량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해석하고 지역별 분포를 분석한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모델의 잔차는 지역역량 이외에 행복에 영향을 끼치지만 관찰되지 않은 요인들의 영향도 함께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관찰되지 않은 다른 요인들의 영향은 지역적으로 랜덤하게 분포한다고 가정하고 잔차를 지역역량의 proxy로 해석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IV. 지역역량의 분포

그렇다면 지역 수준에서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행복 간의 불일치를 설명하는 지역역량은 지리적으로 어떤 분포를 나타내고 있을까?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행복의 예측값이 실제값 보다 작은, 즉 오차항이 음수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어진 물리적 환경만큼 주민들이 행복하지 못하므로 지역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은 전국의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음수의 오차항을 가지는 지역이 몇 개나 되는지를 광역 단위의 전국 분포로 보여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50.9%에 해당하는 116개 지역은 역량이 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회귀분석 자체가 조건부 평균값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에 해당 비율의 전국 분포가 50% 근방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를 지역별로 쪼개서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좀 더 유의미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표 3>에 의하면 서울과 강원, 전북의 지역역량 취약 지역 분포 패턴이 다른 지역들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그 차이는 이들 지역과 다른 광역시들과의 비교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역역량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의 비율이 이들 세 지역은 20%대로 전국 평균 보다 월등히 낮았지만 대구, 인천, 대전, 울산 등 서울 이외의 광역시들은 모두 70% 이상으로 전국 평균 보다 훨씬

〈표 3〉 지역역량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 비율

구분	N	역량(0)	비율(%)	구분	N	역량(0)	비율(%)
전국	228	116	50.9				
서울	25	6	24.0	경기	31	17	54.8
부산	16	7	43.8	강원	18	5	27.8
대구	8	6	75.0	충북	11	6	54.5
인천	10	8	80.0	충남	15	7	46.7
광주	5	3	60.0	전북	14	4	28.6
대전	5	4	80.0	전남	22	13	59.1
울산	7	5	71.4	경북	23	13	56.5
세종	1	0	0	경남	18	12	66.7
				제주	1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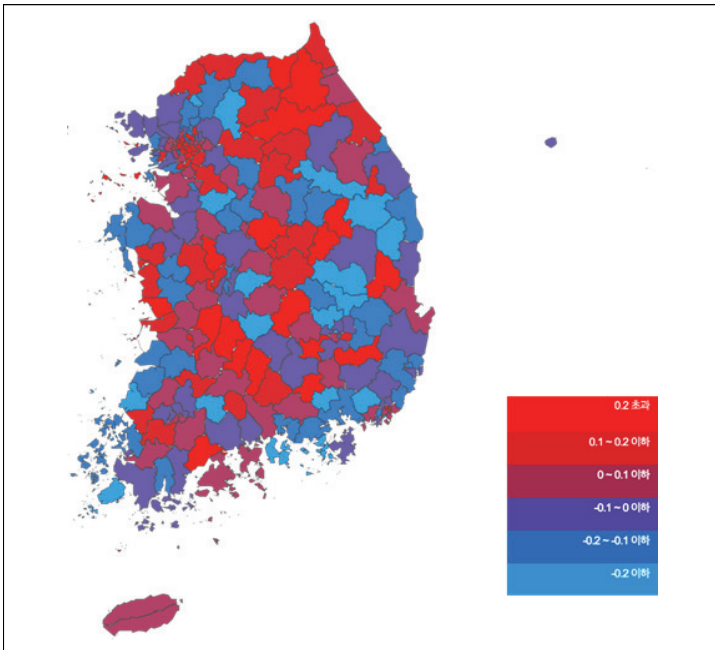
높았다. 광역시와 광역도를 비교하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들은 광역도에 비해 지역역량이 대체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 흥미롭다. 우리가 흔히 서울과 경기, 인천을 묶어 수도권으로 상정하고 거의 동일한 선상에서 정책적 고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어도 지역역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서울과 다른 두 지역, 혹은 인천과 경기 사이에서도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같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과 경기 지역은 서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물리적 발전과 개발의 결과가 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서울과 다른 수도권 지역 간에 이러한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의 문제는 적절한 분석과 결과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더 중요한 연구주제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차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려 한다.

한편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그림 1〉에서는 지역역량의 분포를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별 역량 수준을 전국지도에 옮겨보았다. 붉게 표시된 지역은 실제 행복 수준이 예상 행복 수준 보다 높은 지역을 의미하고, 푸르게 표시된 지역은 반대로 실제 행복 수준이 예상 행복 수준 보다 낮은 지역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남부에서는 서쪽에 붉은 지역이 집중되어 있고 중부에서는 동쪽에 붉은 지역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서울 위쪽으로 푸른지역이 다수 나타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붉은 지역은 전남, 전북의 호남권과 강원도에 집중되어 있고, 푸른 지역은 경기 북부와 경남, 경북의 영남권에 집중되어 있다. 흥미롭게도 이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다소 배치된다. 지역 간 격차를 논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와 함께 영남권과 호남권의 격차도 많이 언급되는데, 지역역량의 관점

에서는 수도권 내 격차도 드러나며, 호남권이 오히려 영남권에 비해 지역역량이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패턴은 종속변수인 주관적 행복만을 봐도 유사하게 관찰되는데, 경기남부권이 경기북부권에 비해, 호남권이 영남권에 비해 대체로 높은 행복 수준을 보여준다. 경기남부권과 경기북부권의 차이는 개발수준의 차이로 이해될 수 있지만, 호남권과 영남권의 차이는 영남권의 개발 수준이 호남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시 추가적인 분석과 결과의 해석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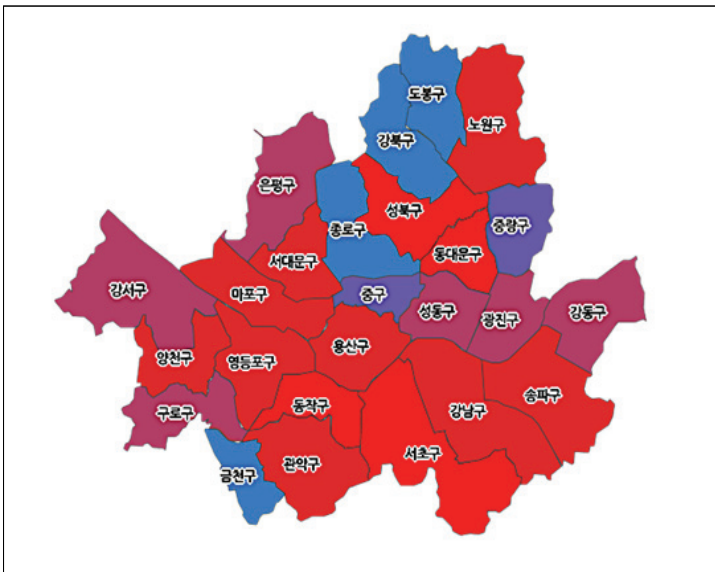
먼저 수도권 내 경기 북부지역의 낮은 지역역량은 상대적으로 인프라의 분포가 낮고 아직 지하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이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진행 중이라는 현실을 볼 때 그 의미를 미루어 짐작 가능하다. 2020년 후반에 7호선 연장이 완료될 예정인 양주 옥정신도시(서울과 지리적접근성이 높음)의 경우 부동산이 활황이라는 시기에도 미분양 사태가 속출할 만큼 평가가치가 낮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상당수가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출퇴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기 남북의 지역역량 차이의 원인은 북부 지역의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 접근성 문제가 한축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지역역량의 전국 분포



한편 영호남 간의 지역역량 비교는 <그림 2>에서 서울의 25개 자치구에서 관찰되는 패턴과 비교하면 더 뚜렷한 특징을 보여준다. <그림 1>과 마찬가지로 지역이 붉을수록 실제 행복 수준이 예상 행복 수준 보다 더 높음을 의미하고 푸를수록 그 반대의 경우임을 의미한다. 지역역량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삶의 조건이 우수한 한강 남쪽에 몰려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강 남쪽에서는 금천구를 제외하고 모든 구가 실제 행복 수준이 예상 행복 수준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강 북쪽에서는 종로구, 중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의 5개 지역에서 실제 행복 수준이 예상 행복 수준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대표적 낙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북구, 도봉구, 금천구가 지역역량의 측면에서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점은 영남과 호남 간의 비교에서 나타난 패턴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그림 2> 서울의 자치구별 지역역량 분포



영남의 경우 호남에 비해 각종 인프라대비 인구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발생하는 생활상의 어려움이 지역역량에 반영된 것이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겠으나, 인구밀집도가 높은 수도권과 서울에서 낙후지역의 경우에 지역역량이 더 낮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추측은 설명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Sen(1980)이 제시한 후진국 여성들이 갖는 '체념적 만족'의 확장판으로 해석하기에도 우리나라의 객관적 여건 및 상황을 볼

때 무리가 있다. 지역이 가지는 삶의 인프라 차이가 지역 역량의 차이와 증첩되어 나타나는 서울시의 패턴과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는 영호남 간의 지역역량 차이는 그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특히 앞으로의 지역 정책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호남 지역에 비해 영남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물리적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남 지역의 행복 수준이 지역의 물리적 수준에 비해 낮다는 점은 투자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지만 그 원인을 정책 측면에 국한시켜 본다면 정책의 파편화(fragmentation) 현상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의 문화에 대한 투자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선 각종 공연이나 전시회를 직접 가서 보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어느 지역에서 문화활동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통인프라의 부족으로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돌봄인프라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젊은 가족이 아이돌봄 활동에 매여 있어야 한다면 지역의 문화활동에 대한 투자는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힘들다. 따라서 문화정책, 교통정책, 돌봄정책과 같이 겹으로 보기에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정책들도 역량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율이 이루어져야 투자 대비 삶의 질 제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영호남 간의 지역역량 차이를 정책의 파편화라는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두 지역에 대한 좀 더 자세하고 심층적인 질적 분석이 요구된다.

특정 지역에서 객관적 환경을 고려한 예상 행복 수준 대비 실제 행복 수준이 낮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객관적 환경을 충분히 활용하여 주관적 만족감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를 지역의 역량으로 해석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적 자원의 투입이 계속된다면 이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자원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지역에선 그 원인을 찾아서 자원 투입과 동시에 취약한 지역역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로 물리적 자원 투입의 전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 관련 정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지방 정부는 단순히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수준을 넘어 정책 간 조율을 통해 정책의 파편화를 최소화하고 삶의 질 제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행복 간의 격차가 발생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지역의 객관적, 물리적 환경을 주민의 만족으로 치환하는 과정을 지역역량으로 정의하였다. 지역역량에 따라 비슷한 수준의 물리적 환경 하에서도 주민들의 만족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역역량 개념은 지역 정책 분야의 연구자들에게나 지방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해 준다.

지역역량의 측정은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행복 간의 회귀식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객관적 삶의 질을 통해 설명되는 주관적 행복의 변이 이외의 부분, 즉 잔차항에 주목하였다. 주관적 행복의 예측 값이 실제 주민들의 주관적 행복수준 보다 높을 경우엔 지역의 객관적 물리적 환경이 주민들의 삶의 만족으로 효과적으로 치환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그 반대의 경우엔 그렇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전자는 지역역량의 수준이 높음을 뜻하고 후자는 지역역량의 수준이 낮음을 뜻한다.

〈그림 1〉과 〈그림 2〉는 지역역량이 지리적으로 어떤 분포를 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전국 분포와 경기도 및 서울시의 분포에서 다소 차이가 보이는데, 전국적으로는 객관적인 여건이 좀 더 좋다고 평가되는 영남권의 지역역량이 호남권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 및 경기도를 떼어서 보면 객관적 여건이 더 좋은 강남권의 지역역량이 강북권의 지역역량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지역의 취약한 역량 수준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이에 대한 분석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아무리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자원을 투자한다고 해도 그것이 주민의 주관적 만족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 비효율적인 투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물리적 투자를 주관적 만족으로 효과적으로 전환시키는 요소를 찾아서 물리적 투자와 함께 고려하여야 최적의 공공투자 포트폴리오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왜 어떤 지역은 객관적 삶의 질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의 주관적 행복 수준을 보이는데 왜 어떤 지역은 주민들의 행복 수준이 객관적 물리적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지에 대한 심층 분석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자원의 배분을 위해 매우 중요한 향후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Andrews, Frank M., & Stephen B. Withey.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ception of Life Quality*. NY: Plenum.
- Blanchflower, David G., & Andrew J. Oswald. 2004. "Well-being over time in Britain and the U.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 1359-1386.
- Campbell, Angus., & E. Phillip. Converse (eds). 1972. *The Human Meaning of Social Change*. NY: Russell Sage.
- _____, _____,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Vol. Russel Sage): NY.
- Carley, Michael. 1981. *Social Measurement and Social Indicators: Issues of Policy and Theory*. London: George Allen&Urwin.
- de Neufville, Judith Innes. 1975. *Social Indicators and Public Policy*. Amsterdam: Elsevier Publishing Co.
- Diener, Ed.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Easterlin, Richard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P. David & M. Reder (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ur of Moses Abramovitz*. New York: Academic Press.
- Fox, Karl August. 1974. *Social Indicators and Social Theory: Elements of an Operational System*. NY: Wiley-Interscience.
- Koo, Jun, & Heechul Lee. 2015. "Regional capability and regional disparity: A conceptual framework and applications within Korea."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20, 121-135.
- Land, Kenneth C. 1983. "Social indicators." *Annual Review of Sociology*, 9, 1-26.
- Layard, Richard. 2005. *Happiness: Lessons from a New Science*. London Penguin Books.
- McMahon, Darrin M. 2006. *Happiness: A History*. New York, NY: Atlantic Monthly Press.
- Nussbaum, Martha. 2003. "Capabilities as fundamental entitlements: Sen and social justice." *Feminist Economics*, 9, 33-59.
- Ogburn, W. F. 1935. "Indexes of social trends and their fluctuations."

-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0(822-828).
- Ogburn, William F, & Abe J. Jaffe. 1936. "Indexes of social tren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1, 776-782.
- Palys, Ted S., & Brain R. Little. 1980. "Social indicators and the quality of life." *Canadian Psychology*, 21, 67-74.
- Sen, Amartya. 1980. "Equality of what." In S. McMurrin (Ed.), *The Tanner Lectures of Human Values* (pp. 257-280). Salt Lake City: Univ of Utah Press.
- Tatarkiewicz, W. 1976. *Analysis of Happiness*. Warsaw: Polish Scientific Publisher.
- Veenhoven, Ruut. 2000. "The four qualities of life: Ordering concepts and measures of the good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 1-39.
- Wilson, John Oliver. 1973. "Quality of life in the United States: An excursion into the new frontier of socio-economic indicators." In EPA (Ed.), *The Quality of Life Concept*. Wasington, D.C.
- 구교준·김성배·윤종현. 2012. 용인 가능한 지역 간 격차와 지역정책. 《한국행정학보》, 46(3), 173-192.
- 구교준·임재영·최슬기. 2015. 행복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정부학연구》, 21(2), 95-130.
- 구교준·이희철·송은주·김지원·박차눔. 2019. 《행복지표체계 구축 기반 연구》, 서울:국회미래연구원.
- 김희재·조정래. 2009. 한국 사회 구성원의 행복 요인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1(4), 1967-1977.
- 류지아. 2016. 소득이 많을수록 더 행복할까. 《한국인구학》, 39(2), 71-95.
- 박인권. 2018. 사회적 약자의 삶과 지역균형발전 : 역량의 지역격차 분석. 《공간과 사회》, 64, 71-114.
- 박종선·황덕순. 2015.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행복하세요? 상대적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문화연구》, 18(3), 1-23.
- 변미리·민보경·박민진. 2018. 《서울형 행복지표 구축과 제도화 방안》. 서울: 서울연구원.
- 이영빈·정창무. 2013. 도시기반시설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8(6), 77-88.

- 이현송 2000. 소득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23(1), 91-117.
- 이희철·구교준. 2019. 역량 중심의 국민행복지수: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정책분석
평가학회보》, 29(3), 115-140.
- 황명진·심수진. 2008. 한국의 행복지수 개발. 《조사연구》, 9(3), 93-117.

Distribution of Regional Disparity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and Objective Quality of Life: From a Perspective of Regional Capability

Jun Koo & Heechul Lee & Jiwon Kim & Chaneum Park

In this study, we defined ‘regional capability’ as a process of transforming the objective and physical environment of a region into the subjective well-being of residents. Regional capability provide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regional policy since it influences the degree to which the physical environment is transformed toward residents’ satisfaction. To estimate regional capability, we developed a regression model for regional satisfaction drawing upon a set of seven objective domains and subjective well-being as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Residuals of this model were used as a proxy for regional capability.

Results showed that the objective and physical environment of a region does not guarantee the satisfaction of residents. Public investment, which does not result i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the residents, would be futile. Thus, it is imperative that regional governments consider transforming factors between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residents’ satisfaction in the public investment portfolio.

※ Keywords: regional capability, happiness, public investment